

# 트럼프 재집권시, 韓 자동차·반도체 등 전략 재수립 필요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정책 영향  
IRA 축소 우려에 K-배터리 비상  
10% '보편적 기본 관세' 부과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대선 유세 현장에서 피격을 당했다. 다행히 오른쪽 귀에 부상을 입는 정도에 그쳤으나 현장은 비명과 혼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번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오히려 상승하며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한국 산업계도 트럼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국 경제도 출렁이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산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4개월이 남아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으며 국익을 위해서 기존 체제를 과감히 변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중국과 갈등 심화, 관세 인상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다양하게 예측되는 가운데, 당선이 확정되기까지 미국의 경제정책이 어디로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 산업계는 미국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구체적인 대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피셔브 포럼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RNC)를 앞두고 리허설을 하면서 무대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에 분주하다. 득과 실이 함께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는 분위기다.

## ◆IRA 축소 우려에 K-배터리 '긴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확대 등 친환경 정책에 부정적이며,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등 보호무역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 한 인터뷰에서 "자동차 100%를 전기차로 할 수는 없다. 그들은(바이든 행정부)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엄청난 양의 보조금(IRA)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IRA를 통해 전기차 확대를 추진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IRA 정책은 7500달러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외에도 AMPC를 통해 Wh(킬로와트시)당 최대 45달러를 공제받

을 수 있다. kWh 당 셀 제조 단계에서 35달러, 모듈 제조 단계에서 10달러를 받는 구조다.

지금까지 미국 내 전기차 제조 및 생산을 촉진한 IRA 정책이 축소·철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배터리업계의 상황도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IRA AMPC에 따른 세액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능력 확보에 열을 올렸기에 IRA AMPC가 축소되거나 철폐되면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만 트럼프도 IRA를 즉각 폐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 공화당 강세 지역도 IRA에 기반한 투자가 늘어나는 등 수혜를 입고 있어서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은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의 중

요한 요소로 꼽혀 대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중국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이 장악한 배터리와 전기차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측면도 기대 있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 감소로 인해 한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어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 ◆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

트럼프 측은 이번 선거 캠페인을 펼치면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을 주장하며 글로벌 교역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전자제품·철강·의약품 등 필수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4개년 계획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고, 친환경차 수출 증가 등으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트럼프 캠프의 공약대로 보편 관세 10%를 한국에도 부과할 경우 대미 수

출이 152억달러(약 2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는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담에 따라 기업 판로에 단기 충격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해당 법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지난 2022년 제정됐다. 이는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5조 5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추가로 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지원법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겠지만 보조금 혜택을 줄이거나 보조금에 상응하는 투자를 더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반도체 업종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한다. 현재 중국의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낸드 플래시 등의 핵심 분야에서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는 무역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처형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인터넷은행, 가계대출 규제 비상... "수익구조 다변화 절실"

금감원, 카카오·케이·토스뱅크 점검  
중소·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  
"기업대출 확대해 수익원 대체해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이 막히면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행은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률 또한 높아지고 있어 또 다른 수익원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을 점검한다.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1분기(3월말) 기준 40조2000억원으로 1년전(29조1000억원)과 비교해 38%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

액은 같은 기간 13조9000억원에서 24조2000억원으로 74% 늘었다. 전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642조324억원에서 681조6624억원으로 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컸다.

앞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넘는 비중이 대한대출로 유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은행에서 나와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이 유입되는 것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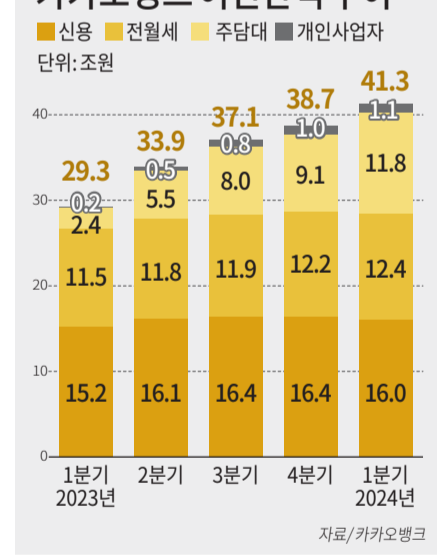
당 은행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앞으로 가계대출에 집중된 영업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가계대출 막히면 기업대출 확대?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처럼 기업대출을 확대해 수익을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대출을 늘렸다. 다만 인터넷은행들은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카카오뱅크 여신잔액 추이



## 한국 최저임금 순위 8년간 '널뛰기'

2015년 17위·2019년 7위·2023년 10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서 연도별 순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에서 코로나19 시기를 전후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간 뒤, 최근 다시 중상위권으로 밀려났다.

21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체 상근근로자 중위임금(가장 많은 임금부터 가장 적은 임금까지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할 값) 대비 60.95% 수준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중위임금 330만 원에 최저임금이 201만 원가량이었던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30개국 가운데 2022년도와 같은 10위에 자리했다. 작년에도 60%대를 유지했으나 그보다 2년 앞선 2021년도(7위)에 비해 3계단 내려왔다. 단, 총 38개 회원국 중 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 등 8개국 수치는 비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3~4년 전과 비교하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지난 2017년 15위에서 2018년 8위로 급상승한 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내리 7위 자리를 지켰다. 2020년도분은 중위임금 대비 62.45%까지 인상된 바 있다.

국내 최저임금 수준은 2015년(48.59%)과 2016년(50.41%)만 해도 30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이후 불과 3년간(2017~2019년) 무려 10개국을 따라잡고 7위까지 올랐으나, 최근 들어 프랑스, 슬로베니아, 멕시코에 뒤져 10위로 처졌다.

20여년 전인 지난 2002년 기준,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24개 회원국 중 23위인 최하위권에 속했었다. 당시 일본이 32.55%로 최하위, 한국이 33.42%로 뒤에서 2번째, 미국이 33.88%로 뒤에서 3번째였다.

우리나라의 중위 대비 최저임금은 2007년(42.86%) 40%를 넘어섰고 2016년(50.41%) 50%대, 2019년(62.66%) 60%대에 진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이중삼중 대책 시스템 강화해야"

>> 1면 '서비스 분산...'서 계속

이번 사태는 '나비테어'라는 항공권 전자발권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발생했다. 나비테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가 운영하는 '밸컨 센서' 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파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와 충돌하면서 발권 시스템이 마비됐다.

두 소프트웨어의 충돌로 블루스크린과 작동 중지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세 항공사의 전자발권 시스템도 마비됐다. 이에 항공사들은 수기 발권으로 절차를 진행했는데, 승객 탑승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됐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결항은 없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IT 대란, 남의 일이 아닙니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이중삼중 대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점진적으로 한 곳씩 바꾸는 패치를 배포하는 시스템적인 보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 방송, 항공, 게임 등의 기업은 시스템 장애로부터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분산과 이중화는 물론,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플랜 B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백대성 기자 iamnds@